

#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 촉구 결의(안)

의안번호	2010 - 24
------	-----------

제안일자 : 2010. 4.

제안자 : 거창군의회

## 1. 주 문

-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촉구하며 별지와 같이 결의안을 채택한다.

## 2. 제안이유

- 우리나라가 일제로부터 해방된 지 65주년이 지나고 있는 지금에도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고 있는 반인륜적 범죄인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하여 피해자들과 민간단체의 노력으로 인해 유엔인권위원회 여성폭력문제 특별보고관은 일본정부에 공식사죄와 법적 배상, 올바른 역사교육 등의 실시를 권고했으며, 국제노동기구 기준적용위원회 전문가위원회는 일본군 위안부는 성노예 제도로써 ILO 29호의 강제노동금지조약을 위반한 사례라고 판단하여 일본 정부에 사죄와 법적 배상을 요구하였습니다.
- 또한 국제사회에서는 2007년 7월 미국 하원 본회의에서 일본군 '위안부' 사례 결의안이 만장일치로 통과된 뒤에 네덜란드, 유럽 연합, 캐나다 의회에 이어 2008년에는 대한민국 국회와 대만 국회에서도 결의서를 채택했을 뿐만 아니라 일본 국내에서도 일본군 위안부 문제해결을 위한 성실한 대응을 요구하는 결의 및 의견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일본정부는 여전히 공식사죄와 법적 책임을 다 하지 않고 있으며 강제적 부인 등 역사를 거꾸로 끌고 가려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태평양전쟁이 침략이 아니라 해방전쟁이라는 등의 망언을 일삼고 있습니다. 또한 역사교과서에도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삭제하여 가르치지 않음으로써 젊은 세대들에게 거짓 역사를 교육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현재 피해자들은 80세 이상의 고령이어서 나날이 사망자가 늘고 있으며 우리 정부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지원법 대상자 234명 중 90명만 생존하고 있어 하루빨리 위안부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시급한 사안임을 통감하면서 이에 우리 거창군의회는 일본 정부에 대한 위안부 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촉구하며 한국정부에서도 문제해결을 위한 대일 외교협상에 적극적으로 실행하여 줄 것을 위안부 피해자들과 7만 거창군민의 염원을 담아 결의문을 채택하게 되었습니다.

**붙임 : 결의문 1부.**

##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 촉구 결의문(안)

거창군 의회는 지난 20년 동안 반인권적인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국·내외적으로 관심을 갖도록 활동해온 피해자들과 민간단체들의 노력을 적극적으로 지지·격려하고

그 동안 유엔인권위원회, 국제노동기구, 국제엠네스티, 미국하원 등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일본정부의 공식적인 사죄와 법적 배상, 올바른 역사교육 등을 일본정부에 권고 하였음에도 일본정부는 이에 공식적인 사과는 물론 일체의 책임있는 자세를 취하고 있지 않음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면서,

하루속히 일본정부가 국제사회의 권고를 성실히 이행하여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와 인권을 회복시키기를 촉구하는 7만 거창군민의 염원을 담아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일본정부는 1930년부터 1945년 종전에 이르기 까지 우리나라와 아시아태평양지역의 어린소녀와 여성들을 강제로 일본군의 성노예로 만든 반인권적·반인륜적 범죄사실에 대해 공식 인정하고 올바른 사죄와 함께 철저한 진실규명을 촉구한다.

하나. 일본정부는 일본군 '위안부' 제도의 진실과 반인권성을 역사교과서에 올바르게 기록하여 다시는 유사범죄가 일어나지 않도록 현 세대와 미래 세대에게

교육하여 여성인권 확립과 아시아와 세계 평화에 이바지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일본의회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한 명이라도 더 살아 있을 때 피해자들의 인권회복과 법적 배상 실현을 위한 특별법을 신속히 제정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대한민국 정부는 미국,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와 일본 시민, 단체의 양심 있는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자국민의 인권회복과 올바른 역사정립을 위해 일본 정부에게 법적 제도 마련과 전담기구 설치를 요구하는 외교적 협상에 조속히 나설 것을 촉구한다.

하나. 대한민국 국회는 생존자들의 여생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절박함을 인식하여 일본의회가 일본군 '위안부' 문제해결을 위한 특별법을 하루속히 제정하도록 양국 의회 간 협상에 조속히 나설 것을 촉구한다.

하나. 거창군의회는 일본군 '위안부' 제도의 반인륜성을 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와 인권이 회복되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일 것이며 인권과 평화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애쓸 것임을 결의한다

2010. 4

거창군 의회 의원 일동